

初期韓國新聞의 民族主義受容*

劉 載 天

I. 序論

II. 《漢城旬報》와 《漢城周報》의

III. 近代民族主義의 起源과 그

民族主義受容

性格

IV. 結論

I. 序 論

西歐의 近代의 新聞이 정보유통에 대한 점증하는 사회적 요구와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성장, 발전해 온 데 비해 우리나라의 近代의 新聞은 그 시대의 사회적·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생되어 성장·발전해 왔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新聞이 등장하였던 구한말에는 보수세력과 개화세력과의 갈등 속에서 開化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점차 노골적으로 진행되었던 帝國主義 外勢의 침략으로부터 國權을 保存하고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나라에 新聞이라는 新文物이 발간되었다. 그 뒤 일제의 식민통치시대에는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민족역량의 배양과 식민정권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민주독립국가의 수립을 위한 이념투쟁의 수단으로서 新聞이 존재해 왔다. 우리나라 新聞이 이와 같이 사회적·정치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新聞들의 使命觀에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1883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近代의 新聞이라고 할 수 있는 《漢城旬報》가 창간된 이래로 1948년 대한민국 정

* 이 論文은 第5次 韓中日 政治文化比較 國際學術會議에서 主題發表된 것임.

부가 수립될 때까지 우리나라 新聞은 나라의 자주독립을 성취하고 국민을 계몽하며 민주적인 민족국가를 수립할 것을 주된 사명으로 삼아 왔다.¹⁾ 이와같은 使命觀은 우리나라 新聞으로 하여금 정보의 전달을 원초적인 기능으로 삼고 발전되어 온 서구의 新聞과는 다른 新聞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었다. 말하자면 서구 新聞의 기능이 환경변화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해 왔다면 우리나라 新聞은 그와는 달리 규범적 측면에 특히 역점을 두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新聞은 規範新聞이었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新聞의 이와 같은 성격은 新聞으로 하여금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조건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체계를 정립하는 동시에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주독립을 유지하고 민주적인 민족국가의 수립을 위한 투쟁을 불가피하게 수행하게끔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新聞은 사회변동을 주도하고 이를 촉진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媒體였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 新聞의 성격, 즉 우리 민족이 추구하고 전개해 온 정치·경제·문화적인 변동의 전반적 과정을 계도하고 대변해 왔다는 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初期新聞에 수용되어 있는 民族의 理念(National Ideal)과 民族主義의 성격을 밝혀보려 한다. 이 연구 과제는 시기로 보아 우리나라 최초의 近代新聞인 《漢城旬報》가 창간되었던 1883년부터 大韓帝國이 종말을 고한 1910년에 이르는 기간을 대상으로 삼아 그 시기에 발행되었던 민족지의 내용분석으로 수행된다. 이 논문은 그 첫 작업으로 《漢城旬報》와 《漢城周報》를 대상으로 하여 그 두 新聞에 受容되어 있는 民族主義의 觀點들을 정리해 본 것이다.²⁾

1) 李海暢, 《韓國新聞史研究》, 서울: 成文閣, 1971, pp. 13~110, 吳仁煥, 〈韓國言論使命感의 時代的 變遷〉, 《政經論集》第11輯, 慶熙大 政經大, 1974, pp. 89~95. 참조.

2) 이 研究에서 사용된 텍스트는 寬勳칼럼 信永研究基金이 1983년에 발간한 《漢城旬報》와 《漢城周報》의 한글 번역판이다. 따라서 論文에 引用된 두 新聞의 記事는 번역판에 번역된 記事임을 밝혀 둔다.

II. 近代民族主義의 起源과 그 性格

韓國에서 民族主義가 대두되고 전개되어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論究한 성과들을 종합해 보면 近代民族主義의 기원에 대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韓國의 近代民族主義는 조선후기 實學思想에서 萌芽가 형성되었다.

둘째, 帝國主義 列強의 侵奪로부터 國權을 보존하고자하는 외세에 대한 저항의 전략으로 近代民族主義가 형성되었다.

세째, 중세사회의 해체과정에서 조성된 봉건적 위기와 관련, 反封建·反侵略의 운동에서 형성되었다.

넷째, 1919년 3.1 운동에 이르러 韓國近代民族主義는 한 단원을 이루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近代韓國民族主義의 展開過程에 대해 큰 흐름에는 공통된 의견의 일치가 있으나 구체적인 民族主義運動의 성격에 관해서는 몇가지 視覺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韓國近代民族主義의 起源은 中國 중심의 세계관과 세계질서이었던 華夷思想을 깨뜨리고 朝鮮의 自主性·獨立性·中心性 등 自主意識을 자각하여 理論化하기 시작한 朝鮮後期 實學思想에서 찾는 데 대해 의견이 일치하나 한편에서는 後期實學派들의 사상을 '위대한 민족적 자각'이었으며 우리나라 近代民族主義 형성의 先驅가 되는, 近代民族主義가 급속히 성장하는 萌芽였다고 평가하는 데 대해³⁾ 다른 한편에서는 實學派諸儒의 민족의식이 체계적이라기 보다 단지 평소의 울적한 심정을 토로했다는 점에서 그 시대를 韓國民族主義史에서 '前史的'인 것으로 보고 있다.⁴⁾

3) 愼鏞廈, 韓國近代社會思想史研究, 서울: 一志社, 1987, pp. 11~31.

4) 千寬宇, 韓國史의 再發見, 서울: 一潮閣, 1987, p. 367.

洪淳昶, 韓末의 民族思想, 서울: 探求堂, 1975.

둘째, 衛正斥邪思想을 反帝國主義運動의 先驅이며 민족의 自主意識과 主體性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近代民族主義의 起源으로 보는 관점⁶⁾과 그것은 외세의 침입을 봉건적 구체제로 강화하여 물리치려 함으로써 近代的 民族主義의 성격으로 규정하는 시각차이가 보인다.⁶⁾

셋째, 開化派의 民族主義를 開化派의 思想과 穩健改革派의 東道西器論의 입장에서 구별해 보는 견해를 들 수 있다. 즉 박규수 시기의 東道西器論, 다시 말해서 斥邪 衛正論의 사상과의 대립 논리로서의 東道西器論은 정치체제론적인 의미는 그다지 중요시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후 왕권제한론이 주장된 拔進開化派의 사상과의 대립논리로서의 東道西器論은 정치체제론 문제에 더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西器를 수용하여 開化하고 富國強兵하는데 있어서는 拔進開化派의 생각이나 東道西器論의 穩健開化派의 그것이 다를 것이 없지만 전자는 군주권을 제한하고 민권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오히려 그것을 위하여 西器를 수용하려 했고 후자의 경우는 전제군주제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강화하고 또 어찌면 糊塗하는 방법으로서 西器를 수용하려 한 것이라는 이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拔進開化派의 民權伸張論도 물론 시대적인 限界性이 있어서 완전한 국민주권론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고 立憲君主制로서의 君民 同治論에 그쳤다. 그러나 그들의 開化概念 속에는 기술적·경제적인 부문에서만만의 開化가 아닌 정치 경제면에 있어서의 開化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穩健開化派는 東道西器論적 開化概念 속에는 확실히 권력구조면의 開化는 제외되고 있다. 김윤식보다 한층 더 진보적인 開化權을 가진 穩健開化派의 한 사람인 유길준의 경우도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본다.

6) 慎鎬廈, 앞의 책, p. 44.

姜萬吉, 韓國民族運動史論, 서울:한길사, 1985, pp. 166~167. 鄭昌烈, 韓末變革運動의 政治, 經濟의 性格, 宋建鎬, 姜萬吉編, 韓國民族主義論 所收, 서울:創作과 批評社, 1982, pp. 32~33을 참조할 것.

넷째, 계급성의 관점에서 3.1운동을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같이 구체적인 民族主義運動의 성격에 대한 평가에 있어 시각의 차이를 들어내고는 있으나 그러한 몇 갈래의 흐름이 어떻게 近代韓國民族主義를 형성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愼鏞廈의 정리가 잘 요약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韓國 近代社會思想史를 보면, 밖으로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는 문제가 절실할 때에는 近代民族主義로서의 開化思想과 東學思想은 물론이요, 前近代的 民族主義로서의 衛正斥邪 思想도 운동에 있어서 연합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안으로 개혁 문제가 대두할 때에는 近代民族主義 내부의 開化思想과 東學思想도 갈등과 충돌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前近代民族主義인 衛正斥邪思想과는 혁명과 반혁명의 극한적 대결과 상호 투쟁이 전개되는 일이 많았다. 1884년 甲申政變과 1894~95년의 閔妃구체제정권, 甲午農民戰爭, 甲午改革, 乙未義兵運動 등은 이러한 葛藤과 鬭爭의 전형적 경우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市民的 近代民族主義 흐름으로서의 開化思想은 초기 開化思想—獨立협회—愛國啓蒙思想으로 크게 발전하였고, 農民의 近代 民族主義 흐름으로서의 東學思想은 初期 東學思想—甲午農民戰爭—天道敎로 발전하여 결국 종교에 귀결되었다.

반면에 前近代的 民族主義 흐름으로서의 衛正斥邪思想은 丙寅洋擾—辛未洋擾—乙未義兵運動을 거쳐 1905년 國權을 빼앗긴 이후에는 各界各層의 抗日義兵武裝鬭爭에 주도적으로 연합하였다.

두 개의 흐름의 韓國 近代民族主義와 한 개의 흐름의 前近代民族主義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가 1919년 3.1운동에 이르러 완전히 합류되어 韓國近代民族主義 발전에 한 단원을 이루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7) 愼鏞廈, 앞의 책, pp.44~45.

이렇게 볼 때 初期韓國新聞의 民族主義수용에 대한 연구는 말하자면 3.1 운동 이전까지의 近代의 民族主義 형성과정에서 민족지들이 수행한 구실을 밝히는 작업이 된다.

그것은 이 시기의 新聞들에 게재된 메시지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수단을 통해 그 시기에 우리사회에 수용된 정보 가운데서 民族性, 民族的 理念, 民族主義의 내용을 찾아내는 일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같은 작업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의 同化過程에서 사회의 집단성원을 민족으로 결속케 해주는, 즉 전체적인 統合을 이룩하게 해주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내용과 정책들을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民族主義가 이데올로기로서 추구하는 이상들, 즉 自由와 平等과 自治라는 價値들이 어떻게 主唱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주요한 연구성과들이 있다.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韓興壽는 <大朝鮮獨立협회會報>의 內容分析을 통해 독립협회가 '獨立'의 理念을 궁극적인 목표가치로 설정하고 그것을 外延으로서의 自主와 內包로서의 自強으로 이원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안으로 향한 自強의 實現方向의 摸索을 통하여 近代化의 過度的 계기들을 독립의 이념으로 收斂시켰음을 밝혔다. 즉 방법으로서의 이념에서 과도기의 開化思想을 開明進歩로 繼承 발전시키고 斥邪思想을 國權自立으로 發展, 統合시켜 '泰西'에 대한 相反된 對應의 조화를 이루었고 民權自修의 새로운 지표를 더하여 독립사상으로 묶어놓음으로써 오늘로 이어지는 韓國民族主義의 방향설정을 굳혀놓았다는 것이다.⁸⁾

李萬甲은 <獨立新聞>의 사실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목표가치로서 忠君愛國, 學文, 合理, 民主, 平等, 遵法, 公正, 外勢警戒, 生活態度改善 등

8) 韓興壽, 獨立협회會報의 內容分析, 社會科學論集, 제 6집, 延世大學校 社會科學 研究所, 1973, p. 49.

이 강조되었다는 것을 밝혔다.⁹⁾

愼鍾夏는 독립협회의 社會思想을 自主獨立思想, 自由民權思想, 自強改革思想이라는 세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自主獨立思想은 다시 自主國權, 利權反對, 中立外交, 開化自強獨立, 民族文化를 주된 요소로 삼고 있으며 自由民權思想은 國民自由權, 平等權, 國民參政權, 議會設立 등을, 또 自強改革思想은 立憲代議政體, 行政, 財政改革, 新教育, 事業開發, 近代國防, 社會慣習改革 등을 政策이나 價値로 삼고 있다고 보았다.¹⁰⁾

金珉煥은 開化期民族誌의 내용분석을 통해 당시 新聞들이 대외적 상황에 對應하는 데 있어서는 自主獨立을, 대내적 상황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開化自強을 목표가치로 내세웠다는 것을 밝혔다.¹¹⁾

이상과 같은 연구성과들은 民族主義 이데올로기가 추구했던 내용으로서의 가치들을 내용분석을 통해 찾아낸 것이다. 그러나 연구방법의 이론구조에 있어 유형주의적 분석방법이나 사회구조적 분석방법을 원용하거나 적용하려는 시도는 미약했다. 그 까닭은 내용분석방법이 지니고 있는 한계점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뜻에서 본연구는 내용분석방법을 주로 質的分析에 의존하면서 그것을 가능한한 유형화하거나 사회구조적 분석을 시도하려 한다. 다만 그와같은 분석은 歸納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유형화나 사회구조적 접근을 위해 적용할 이론체계가 아직 우리의 경우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民族主義전개과정을 유형화하거나 이를 사회구조적 특성과 관련시켜 분석할 우리 나름의 이론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歸納的方法으로 그같은 시도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서술에 원초적 관심을 두기로 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가지 관점을 전제

9) 李萬甲, 獨立新聞에 표시된 가치관념, 韓佑邱博士 停年紀念史學論叢, 서울: 지식산업사, 1981, pp. 593~623.

10) 愼鍾夏, 獨立협회研究, 서울: 一潮閣, 1976.

11) 金珉煥, 開化期民族誌의 社會思想, 서울: 나남, 1988, p. 293.

로 삼고자 한다.

첫째, 民族主義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民族主義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양하다. 예컨대 '내셔널리즘이란 요컨대 네이션의 獨立, 統一 및 發展을 指向, 추진하려는 사상과 운동의 총칭인데 내셔널리즘의 담당자를 네이션의 세 뜻, 곧 국가, 국민, 민족중 어느 것으로 보는가에 따라 내셔널리즘은 國家主義, 國民主義, 民族主義라고 번역될 수 있다'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民族主義를 民族性이나 民族的 理念과 동일시하기도 한다.¹²⁾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民族主義를 민족성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히 민족성원의 일치된 共感性的 表現만은 아니며,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성격, 즉 平等과 自由, 自治라는 성격을 추구하는 변혁의 사상체제이며 이데올로기라는 관점으로 파악할 것이다.¹³⁾ 따라서 만일 民族主義를 그들 시대나 사회의 이데올로기로 파악할 경우 여기에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각 분야에서 民族主義에 의한 정책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내용의 분석도 그점을 강조하는 데 유의하게 될 것이다.

둘째, 분석자료의 해석에 있어 民族主義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지나치게 도식적인 논리의 적용을 배제할 것이다.

셋째, 民族主義를 단순히 어느 한 시대 민족성원의 총동적인 대외적 반응으로 인식하는 성향을 경계할 것이다. 이 점은 특히 韓國近代民族主義의 전개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 강조되어야 할 태도라고 생각된다.

Ⅲ. 《漢城旬報》와 《漢城周報》의 民族主義受容

1883년에 創刊된 우리나라 最初의 近代的 新聞인 《漢城旬報》와 그 뒤를 이어 1886년에 創刊된 《漢城周報》는 모두 정부가 발행한 新聞들이다.

12) 韓國民族主義의 理論構造, 서울: 지식산업사, 1983, p. 47.

13) 같은 책, p. 53.

따라서 이 新聞들은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穩健改化派의 사상과 정책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新聞들은 모두 나라와 백성의 開化를 위해 刊行된 것이다. 이같은 발간목적은 다음과 같은 《漢城旬報》의 창간사인 '旬報序'에 잘 나타나 있다.

禹는 九鼎을 만들어 九州를 형상하였고 周官에는 國土를 구분하였으나 要服, 荒服이외는 조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山川이 막혔고 文物과 制度가 달라서 德이 베풀어지지나 힘이 이르지 않기 때문에 先王들이 먼 곳까지 경략하는데 마음을 쓰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風氣가 점차 열리고 智巧도 날로 발전하여 船舶이 전 세계를 누비고 電線이 西洋까지 연락되었는 데다가 公法을 제정하여 國교를 수립하고, 항만, 포구를 축조하여 서로 교역하므로 南北極, 熱帶, 寒帶 할 것 없이 이웃 나라와 다름이 없으며, 事變과 物類가 온갖 형태로 나타나고 車服, 器用에 있어서도 그 기교가 일만 가지이니, 世務에 마음을 둔 사람이라면 몰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朝廷에서도 博文局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어 外報를 폭넓게 번역하고 아울러 內事까지 기재하여 國中에 알리는 동시에 列國에까지 頒布하기로 하고 이름을 <旬報>라 하여 이문을 넓히고, 여러가지 의문점을 풀어주고, 商利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니, 中國, 西洋의 官報, 新報를 우편으로 교신하는 것도 그런 뜻에서이다. 세계속의 方位, 鎭沒, 政令, 法度, 府庫, 器械, 貧富, 飢餓에서 人品의 善惡, 물가의 高低까지를 사실대로 정확히 실어 밝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褒貶勸懲의 뜻도 들어있다. 그러나 讀者들이 먼 것을 외면하고 가까운 것만 좋아한다면 휩쓸려 건다가 자기 걸음걸이마저 잃어버리는 격이 될 것이고 새 것에만 어둡고 옛 것만을 고집한다면 우물에 앉아서 제 것만 크다고 하는 격이 될 것이니, 반드시 때와 형세를 살펴 무작정 남만 따르거나 자기 것만 고집하지 말고 取捨와 可否를 반드시 道에 맞도록 하여 정도를 잃지 않은 뒤에야 거의 開局한 본래의 뜻에 맞을 것이다.¹⁴⁾

14) 漢城旬報, 1883. 10. 31. '旬報序'

이상과 같은 목적으로 창간된 이들 新聞은 開化를 위해 두가지 편집방침을 채택하고 있다. 그 하나는 國際뉴스를 통해 세계의 움직임을 알리는 일이며, 나머지 하나는 외국 新聞이나 잡지에 실린 해설기사나 논설들을 번역하여 실림으로써 西洋의 여러 제도와 문물을 소개하고, 간접적으로 그 같은 제도나 문물의 수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편집방침은 정부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된다. 이것은 두 新聞이후에 창간된 여러 民間新聞들이 國權의 守護와 西洋의 制度와 기술의 도입, 정치개혁과 自強을 위한 산업개발 등을 직설적으로 주장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같이 《漢城旬報》와 《漢城周報》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國權의 수호와 西洋文物의 수용을 表出하였던 것은 穩健開化派의 상대적인 소극적, 수동적 개혁의지와 정부기관지라는 新聞의 성격양자가 작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 新聞에 표현된 民族主義의 내용이나 정책 역시 제3자적 입장을 취한다. 즉 新聞 자체의 의견으로서보다 外國新聞이나 잡지 또는 文獻들을 번역하여 게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帝國主義列強의 침략성을 일깨우기 위해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뉴스를 어떤 뉴스보다 우선해서 게재한다던지 또는 국권의 保全을 위해 武力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世界 列強의 軍備뉴스를 자주 실는 慣行이 그러하다. 이러한 메시지 전달 방법은 논설이나 해설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두 新聞의 메시지 전달방식을 전제로하고 이들 新聞에 나타나 있는 民族主義受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自主的인 國權의 保全을 위한 메시지

開港과 더불어 직면하게 된 帝國主義列強의 침략위험을 극복하고 自主的인 國權의 保全을 위해 이들 新聞은 백성들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사회의 동화과정을 통해 민족성원을 통합하려 했다. 그같은 노력은 아래와 같은 메시지 내용들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帝國主義列強의 침략정책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관점을 보여준다. 즉 列強의 弱肉強食을 경계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그러하다.

“세상이 날로 開化되어 모든 文物이 날로 더욱 발달함에 따라 사람의 氣慾도 더욱 심해 간다. 저 강성하다는 나라를 가지고 보더라도 모두 만족을 모르고 감이 군함을 만들면 울은 대포를 만들고 저쪽이 육지를 잠식하면 이쪽은 해도를 병탄하여 서로 상대 나라 보다 우월하기를 힘써 백성을 도륙하고 화기를 해친다. 비록 우주 가운데 큰 나라를 차지한 자라도 인애하는 마음을 뒤로 하고 전쟁의 이익만을 일삼아서 욕심이 거기에 따라 더욱 자라고 분노하는 마음을 항상 품어 약육강식이 항상 그치지 않는다.”¹⁵⁾ 또한 남의 나라의 틈을 엿보고 남의 흠을 이용하여 교류할 만 하면 교류하고 병탄할 만하면 병탄을 해버린다.”¹⁶⁾

이러한 帝國主義列強에 대한 백성의 자각을 촉구하는 메시지 전달의도는 우리나라 주변정세의 변화에 대한 인식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그같은 인식은 먼저 中國이 西洋의 침탈을 받고 있다는 데 대한 불안의 표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華夷思想을 극복하지 못하고 안타까움과 함께 中國이 西洋의 침탈을 물리치고 여전히 ‘중토에 앉아 외국을 조정하게 되고 오대주가 하나로 합하여 중원으로 모여들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었다.¹⁷⁾ 그러나 주변의 列強 가운데서 日本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은 나타내지 않고 다만 그들이 天皇制 아래서 서구의 제도와 문물을 수용하여 발전하고 있다는 소개에 그치고 있는 반면 帝政러시아에 대해서는 그 침략성을 고발하고 있어서 대조적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러시아에 대한 관점을 잘 들어내 주고 있다고 하겠다.

“러시아는 세계에 제일 큰 나라이다. 그러나 토지가 모두 농사에 부적당하고 기후가 거의 불순하다. 또 북쪽은 氷洋이어서 항해하기가 아주 어렵고 3면 역시 모두 이웃 나라와 접해 있어 내해도 통상의 편리를 주지 못한다. 이로 본다면 러시

15) 漢城旬報, 1983. 12. 20. ‘各國近事’, ‘鎔兵議’

16) 漢城周報, 1886. 5. 31. 私議 ‘論회람講難’

17) 漢城旬報, 1883. 11. 20. 各國近事, ‘華人防邊策’

아는 세계에서 가장 빈국이어야 하는데 이처럼 부강한 것은 러시아가 전국한 이래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데 뜻을 두어 한결같이 대양과 통할 길을 개척하고 남쪽지방을 개척해서 흑土耳其(터키)를 공격하기도 하고 혹은 波斯(페르시아)를 침략했다. 그래서 동양에 있는 여러 나라는 모두 그들의 침략을 받았다. 그 결과 지금은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미국, 일본 다섯 나라를 합하여 세계 6대 강국이라 한다. 그러나 그 인구, 정치, 무역, 운수 등은 다른 다섯 나라에 비해 제일 못하고 다만 해군과 육군의 예산은 다른 다섯 나라보다 많다.”¹⁸⁾

둘째, 西勢東漸을 경계하여 韓, 中, 日, 東洋三國의 共存共榮을 주장하며, 힘을 바탕으로 한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東洋三國의 共存共榮은 西洋帝國主義列強이 전세계를 植民地化해 가는 국제정세를 통찰하고 특히 아세아에서 그 당시 베트남과 버마가 植民地化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더욱 西勢東漸의 위험을 피부로 느끼는 데서 강조하게 된다. 東洋三國의 共存共榮과 관련하여 밖으로는 中國과 日本 두 나라가 결탁하고 國內에서는 임금과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합쳐 부강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밀고 나가는 한편 위태하기 전에 안전을 도모하고 혼란해지기 전에 다스림을 도모하여 나라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메시지는 결국 韓, 中, 日, 各國이 獨立, 自強하여 共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족내부의 통합을 성취하려는 民族主義의 정책의지라 하겠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그러한 점을 잘 대변하고 있다.

“유독 스스로 지키고 있는 나라는 우리 나라와 中國, 日本뿐인 것이다. 이 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독립 자강하여 영원히 걱정 없을 것을 보장 할 수 있겠는가.

현재 東西洋 각국이 서로 講和하여 조약을 맺어 통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公法에 의거하여 論議를 결정, 비준하고 있다. 아, 그러나 저들 각국은 일단 자신들에게 이익이 있을 것을 보기만 하면 公法을 저버리고는 두려워하지 않고 조약을 파기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음은 물론, 끝내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억제하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무시하는 형세를 이루게 되어 다시는 講和라는 것이 존재할

18) 漢城旬報, 1884. 7. 3. 各國近事, ‘俄國誌略’

수 없게 되고 만다. 이는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중략)……‘동양각국의 위정자들은 의당 신중히 살피서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事變이 닥쳐 오는 것에 대해서는 智人이나 達士라도 미리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國勢의 강약은 명줄의 多寡에 있는 것은 아니고, 국제의 빈부는 版圖의 대소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임금과 백성이 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부강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밀고 나가는 한편 위태하기 전에 안전을 도모하고 혼란해지기 전에 다스림을 도모해야 된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乖離 분열되는 걱정이 없고 밖으로는 양국이 결탁하는 후원을 얻게 되면, 비록 백만의 유럽인이 있더라도 그들을 엿볼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하의 時局에 대응하는 방법인 것이다.’¹⁹⁾

한편 帝國主義列強들은 國際法이나 國際間的 條約도 어기고 植民地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弱肉強食 중심의 국제질서를 냉철히 제시하면서 힘을 수반하지 않는 한 국가간의 외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自強을 강조함은 물론 임금과 백성의 일체를 또한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도 國權의 保全을 위한 自強과 民族統合이라는 民族主義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 아래 기사들이 그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례이다

“바야흐로 시국이 어지러워 불안하니 옛 것을 끌어다가 오늘을 증명할 수 없을 듯하다. 대개 5洲人民이 서로 무역을 통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고 戰爭을 능사로 삼아 千百代의 변화를 열고 천백국의 紛爭을 자아내지 않음이 없으니 至正至中한 約條로써 천하에 信義를 세우지 않거나 不偏 不倚한 법으로써 천하의 공평을 행하지 않는다면 백성이 생존하고 國家가 保存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通商하는 各國들이 모두 條約을 체결하고 公法을 제정하여 감히 어기지 않고 준수하여야 大小國이 유지되고 권리가 서로 균등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바로 條約의 뜻과 公法의 힘을 입어 5주의 모든 나라들이 모두 干戈 대신 禮物를 사용하여 스스로 太平을 이룩하고 영원한 友邦으로 敦睦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5洲의 큰 땅과 萬國의 많은 나라에 貧富 強弱이 다르고 仁暴 衆寡가 같지 않기 때문에 強弱과 弱強이 구분되고 권리가 편중되어 비록 條約이 있다 하나 나에게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強者는 이치를 왜곡하여 편리한대로 말을 하고, 비록 公法이 있다 하나 弱者는 감히 예를 끌어다가 증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조약과 公法이란 다만 부

19) 漢城周報, 1886.3.8. 私議, ‘論天下時局’

강한 자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남을 꾸짖는 도구일 뿐이며 또 富強한 자들이 條約과 公法을 빌어 저희들에게만 편리하게 하는 방편에 불과할 뿐이다.

아, 서구인들이 동쪽으로 온 뒤 비록 條約을 체결하고, 公法을 준행한다고 하였으나 그 행위를 규명해보면 우리를 능멸하고, 압박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렇고 서도 조약을 체결하여 천하에 信義를 세우고 公法을 信奉하여 천하의 公平을 행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중략)…… 그러나 혹은 몇년이 지나지 않아 조약을 어기고 혹은 몇달이 지나지 않아 조약을 어기며, 심한 경우에는 조약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조약을 어기며, 서로 약속한 말이 아직 컷가에서 떠나기도 전에 조약을 어겨 문책하는 사신이 길에 연달았고, 문책하는 군대의 包火가 갑자기 터지니 나는 조약을 맺음으로 不和가 생기는 것을 보았으나 條約으로 인해 영원한 맹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萬國의 통상에는 다만 貧富와 強弱의 힘만이 있을 뿐, 條約이나 公法은 없는 것이다. ……(중략)…… 만약 強弱이 서로 비슷하고 貧富가 서로 균등하다면 비록 조약이 없고 공법이 없더라도 누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겠는가. 治國의 道는 因循하지 말고, 苟且하지 말고, 外飾을 버리고, 虛橋를 없애고, 具文을 버리고, 營私를 없애고, 偏循을 버리고, 拘泥를 버리고 斯詐를 없애고 처음에는 부지런하다가 뒤에 게으르지 말고, 세월만 보내지 말고, 실이 없는 명분만 따르지 말고, 西洋제도를 본받되 겉보기만 모방하지 말고, 백성을 다스리고, 官職에 있되 뇌물만을 탐하지 말고 백성을 기르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工人을 가르치고, 商人을 사랑하고 현자를 등용하고, 有能한 자를 임용하고, 관리를 선택하되 虛式을 伽리고 實效를 숭상하며 上下의 화목을 돈독히 하고 예술을 중히 여기며 번잡한 것을 없애고, 實效를 도모하여 백성들과 함께하고 各國과 통상을 하는데 정성을 다하여 彼批의 情이 통하고 遠近할 것 없이 막힘이 없고 上下의 뜻이 貴賤할 것 없이 다 통한다면 안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밖으로 外國을 상대하는 도가 오로지 이에 있다.”²⁰⁾

“주위 나라와 外交하는 데는 道가 있으니, 內政이 잘 닦아지면 外交는 자연 쉽게 이루어지고 內政이 닦아지지 않고 措置하는 일이 적절하지 못하면 아무리 패배와 좋은 珠玉을 날마다 실어다주어도 결국은 무시 당함을 면치 못하는 것이고 나라가 크고 작은 것과 강하고 약한 형세는 논할 것이 아니다. ……(중략)……우리나라는 면이 바다로 막혀있고 土地가 비옥하고 人口 역시 번성하며 山川과 江海에는 자원이 풍부하며 게다가 運輸마저 편리함이라. 이와같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부강책을 힘쓴다면 거의 洲를 누비고 萬國을 앞지를 수 있을 것이다. 근래

20) 漢城周報, 1886. 5. 24. 私談, ‘論西日條約改證案’

에 外洋新報를 보니, 그들이 우리나라를 경멸할 뿐만이 아니라고 하니, 그것은 外人들이 내지의 사정을 알지 못한 데서 연유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니. 나는 모든 외국들이 모두 우리나라를 敬慕하지 않고 탐학을 일삼을까 두렵다. 우리나라는 실로 貿易하기에 편리한 곳인데, 하물며 오늘날 英國과 러시아가 그들의 형세를 東洋에서 서로 다투는 이때이겠는가. 우리나라가 이미 외국과 통상을 교섭해서 條約을 맺어 권리를 限定하고 공법을 확정해서 시비를 결단하고 있으니, 외교도 잘한 것이고 우의도 敦篤하다고 할만하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믿을 만한 건덕지가 없고 저들에게는 공경할만한 마음이 없으니, 저들이 만약 우연히 거슬리는 바가 있어 갑자기 충칼을 동원하여 條約을 폐기하고 公法을 배신하고 돌아보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그들을 대처할 것인가. 월남, 버마의 前轍을 밟게 될 것이니, 어찌 公法과 條約만을 外交의 중요함으로 여겨 스스로 진흥책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오늘날 群雄이 角逐하여승패를 다투는데 그들이 믿는 것은 兵制로써 海陸軍의, 형세가 戰爭과 守備하기에 넉넉하며 銃砲, 汽船이 수송과 사용에 이마지하기에 넉넉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軍制는 아직 初創期에 불과하고 기선 역시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으니, 이것으로 저들을 대적하고자 한들 되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外人들을 敬服시키겠는가. 鄙見에는 정령의 시행이 적절함을 잃지 않는 것이 첫째이고, 士民이 한마음으로 즐거이 상을 받드는 것이 둘째이며, 도로를 보수하고 정비하여 교통을 편리토록 하는 것이 셋째이고, 外務를 선택하여 임명하고 교제에 禮義를 다함이 넷째이다. 이 네 가지가 잘되면 外人들도 탐학의 마음을 버리고 날로 敬慕의 마음을 더하고 隣誼도 더욱 돈독해지리라 생각된다. 교제의 道가 국가에 있어서 참으로 중대한 것이다.”²¹⁾

2. 政治改革과 民族統合의 메시지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漢城旬報》와 《漢城周報》는 穩健開化派가 장악한 정부에 의해 발간되었다. 따라서 ‘東道西器論’ 혹은 ‘洋務論’의 입장에 서서 開化政策을 수립하고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므로 이 두 新聞도 그와 같은 정책을 반영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다. 즉 《漢城旬報》는 西器뿐 아니라 西道의 채택도 표출함으로써 政治改革을 간접적으로나마 主唱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旬報

21) 漢城周報, 1886. 8. 23. 私議, ‘論外交’

는 政治改革을 주장하면서도 임금과 백성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관점에서 民族統合論을 강조하는 한계는 보인다. 이것은 極進開化派의 政治改革도 君主制의 폐지까지는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시대 전제군주정체 내에서 정치개혁파들이 당면했던 공통된 한계라할 것이다. 이에 반해 《漢城旬報》는 철저하게 ‘東道西器論’을 편다. 따라서 정치개혁 없는 임금과 백성과의 하나됨을 강조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같은 穩健開化派 정부가 발행했던 두 新聞의 이러한 성격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極進開化派에 의한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간 후 평소 《漢城旬報》의 진보적 논조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보수주의 세력이 博文局을 습격하여 新聞간행시설을 파괴한 까닭에 旬報의 간행이 중단되기에 이르며 그후 《漢城周報》로 재창간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周報는 보수적 성향을 지니지 않을 수 없게 된 데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²⁾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고 《漢城旬報》의 政治改革과 民族統合 등에 대한 메시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立憲政體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을 지적할 수 있다. 《漢城旬報》는 다음과 같이 歐美의 立憲政體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라고 하겠다. 특히 이 글에서 歐美立憲政體를 소개하는 까닭은 그것을 채택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데 있다고 밝힌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歐美 兩洲는 建國은 비록 많아도 治國의 요점은 다만 二端이 있을 뿐이니, 즉 ‘君民同治’와 ‘合衆共和’인데, 모두가 이를 ‘立憲政體’라 일컫는다. 대체로 立憲政體는 三大權이 있으니 첫째는 立法權으로서 法律을 제정하여 立法府로 하여금 이를 관장하도록 한다. 둘째는 行政權으로서 立法官이 제정한 法律에 의거하여 정치를 행하는 것인데 이는 行政府로 하여금 관장하도록 한다. 셋째는 司法權으로서 立法官이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형법을 시행하고 訟獄을 처결하는 일을 사법부로 하여금 관장하도록 한다. 그러나 3大府의 조직이 나라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概論하여 採擇에 이바지할까 한다. ……(중략)…… 대저 3大府의 權利를 확정하고 3大官의 조직을 담당하여 國典으로 삼는 것이 곧 憲法이다

22) 李光麟, 韓國史講座(近代篇), 서울: 一潮閣, 1981, pp. 236~237.

대체로 憲法은 혹 君主가 정하기도 하고 혹 君과 民이 함께 정하기도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일찌기 憲法을 설치한 적이 없었고 개국 이후로 관행한 法도가 오랜 세월에 누적되어 마침내 하나의 憲法이 되어버렸다.

상고하건대 泰西의 政俗은 君主 및 民主를 막론하고 모두 상하 議院을 설치하여, 일체 軍國人事를 下院에서 공동으로 酌議하여 上院으로 올리면, 上院에서 또 서로 酌議하여 下院으로 내리는데, 여기서 의결한 것은 同異를 막론하고 합해서 上裁를 청하는 바, 아무리 君主의 尊貴로도 자기의 뜻대로 獨行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 번 憲法이 정해진 뒤에는 또한 정해진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쉽게 변경할 수 없다.

西人(西洋人)이 말하기를 '이 憲法이 있는 이후로 立法官은 立法만 할 뿐 行政은 할 수 없고 行政官은 行政만 할 뿐 立法은 할 수 없으므로 私慾을 품은 자가 그 욕망을 마음대로 펴지 못하고 죄가 있는 자 및 소송하는 자가 모두 사법관의 관할을 받되 사법관은 立法과 行政 兩官의 指囑(지시와 촉탁)을 받지 않고서 오직 법에 의해 형벌을 시행하고 이에 의거해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벌 주려 하는 자가 감히 그 毒을 부리지 못하니, 이는 실로 三大權 분립의 제일 이익이다. 예로부터 재상들이 흔히 적임자가 아니어서 정치가 거행되지 못하고 백성이 편안히 못했던 것은, 혹은 문벌, 혹은 黨與로 사람을 동용하고 일찌기 皇子를 널리 뽑아서 정치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立憲政體는 民選을 근본으로 삼아 일체 그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國中の 현능한 자는 누구나 그 議院이 될 수 있고 또한 누구나 그 재상이 될 수 있으니 어찌 小人이 임금을 不義에 빠뜨리는 일이 있겠는가. 이것이 또한 입헌정체의 제일 이익이다' 하였다.

그러나 인민에 슬기가 없으면 함께 의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인민들에 슬기가 많아서 국가의 治亂과 得失의 연유를 안 다음에야 이런 일을 거행할 수 있다. ”23)

둘째, 議會制度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한 수용태도에는 물론 君과 民이 한마음을 이루는 제도라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民族統合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의회제도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이라 하겠다. 특히 歐美의 의회제도를 찬양하고 中國의 전제군주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23) 漢城旬報, 1884. 1. 30. 各國近史, '歐美立憲政體'

“西洋에는 君主國이 있고 民主國이 있는데 君主國은 一切 정사를 御政(임금이 정하는 것)에 의해서 하고, 民主國은 民望이 있는 자를 公舉하여 정사를 맡기되, 邑宰로부터 總統에 이르기까지 모두 民聽를 거쳐서 하는데 무릇 날마다 시행하는 公事를 반드시 상하가 서로 의논하여 타협이 일치된 다음에야 사무를 시행하기 때문에 위에서는 獨裁를 할 수 없고, 아래서는 獨行을 할 수 없다.”²⁴⁾

“泰西의 각국이 中原보다 나중에 開闢하였지만, 급진적으로 나날이 성대해져서 財用이 충분하고 兵士가 雄強하여 일약 中國이 따라갈 수 없게 되었으니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대체로 西洋各國은 君과 民이 한 마음이어서 政事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모두 議院의 타협을 거치되, 두번 세번 타협한 연후에 거행한다. 이 때문에 안으로는 荷處殘酷한 정사가 없고 밖으로는 防衛와 保守의 적의함이 있으며, 평상시에는 應運(物貨의 交易을 힘써)을 經營하는 힘을 다하고, 사변이 있을 때는 公義에 급히 달려가는 정성을 다하여, 마치 心志가 股肱을 부리듯 手足이 頭目을 방어하듯 하여, 옷사람이 팔과 손가락을 부리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팔과 손가락의 도움을 거두니 이른바 나라를 위할 뿐 가정을 잊고, 공을 위할 뿐 私를 잊는다는 것이다. 이미 君과 民이 혼연일체가 되어 上下가 서로 융화함으로써 국운이 창성하여 수십년 동안에 머나먼 바다를 건너와서, 본경 뿐만이 아니라 크나 큰 중원에까지 발자취가 두루 미치게 된 것이 바로 그 밝은 효험이니 진실로 크게 볼 만하다.

中國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上과 下의 형세가 나뉘어 서로의 격차가 하늘과 땅 같아서 體는 엄숙하고 情理는 멀다. 그래서 臣은 君으로 더불어 民은 官으로 더불어 모두 樽에 부속되어 친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아랫사람이 하고 싶은일을 위에서 반드시 알아서 해주지 못하고, 아랫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옷사람이 반드시 그를 살피서 없애지 못한다. 그리고 司牧(지방관을 가리킴)의 권한은 簿書, 錢穀, 鞠訟을 처리하는 이외에는 다른 일이 없다. 그러니 백성들의 生計가 어떠하며, 困苦가 어떠하겠는가. 그러나 撫字(백성을 어루만져 사랑함)와 鞠謀(백성을 양육함)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도 하지 않는다.”²⁵⁾

3. 民族經濟의 發展을 위한 메시지

이 시기 최대의 민족적 관심사는 國家主權의 保全이었으며, 그것을 위해 自強이 강조되었다. 自強은 西洋의 제도와 기술을 도입하므로써 정치

24) 漢城旬報, 1884. 1. 30. 各國近史, ‘中西法制異同說’

25) 漢城旬報, 1884. 1. 30. 各國近史, ‘在上不可不下達民情論’

적 개혁과 함께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漢城旬報》와 《漢城周報》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정치적 개혁의 메시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발전에 관한 한 일관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즉 민족경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혁과 기술도입 및 재정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두 신문은 논설이나 해설기사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뉴스의 게재에 있어서도 帝國主義列強의 군비경쟁을 어떤 뉴스보다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통해 國力の 강화에 대한 국민여론의 합의를 유도하고 있으며, 나아가 列強의 國權侵奪을 막기 위한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약소국가들이 침략당하는 뉴스를 또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지면에 뚜렷이 나타나 있다. 이같은 뉴스취급과 함께 논설이나 해설에 반영되어 있는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의 주장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관점을 간추려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開化自強을 위해 정부의 주도를 경제개혁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財政과 稅制의 개설했, 錢政의 개혁 및 산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에 입각한 경제정책의 수립을 위해 각종 조사통계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등이 그러하다. 아래와 같은 《漢城周報》의 논설이 그같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새로 하나의 법규를 세워 統計年表局이라 명명하고, 특별히 鈎戰의 책임을 감당할 만한 명망과 才識이 있는 사람을 揀擇하여 長으로 임명하고, 특별히 일을 감내할 만한 정직한 사람을 몇 사람 가려서 보좌하게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긴다. 그리하여 우선 海關稅局 및 內外衙門, 機器局, 典關局, 濟衆院, 博文局, 農桑局 등에서부터 여러 各司와 京外州府에 이르기까지 모두 司會鈎考의 법을 적용하여 1년의 회계에 의해 한달의 회계를 조사하고 한달의 회계에 의해 하루의 회계를 조사하게 해서 밖에 쓰여지는 비용을 안에서 모두 알고, 안에서 쓰여지는 비용을 밖에서 모르는 것이 없게 한다. 겸해서 관원의 다과와 직무의 勤慢을 조사하게 하여, 직무

를 준수하는 자와 어기는 자에 대하여 즉시 黜陟과 상벌을 시행한다면 사람들의 사치하려는 마음이 지탄을 받아 움츠러들게 되고, 욕망도 절제되는 바가 있어 방종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관리의 비행을 방지하고, 백성들의 재화를 넉넉하게 할 뿐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을 恭儉하게 만들고, 국가를 반석위에 올려 놓을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²⁶⁾

둘째, 두 신문은 특히 鑛業과 商業의 振興을 강조하고 있다. 자본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의 발전은 鑛業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農業과 工業이 있다고 하더라도 商賈가 없으면 물건이 너무 많이 쌓여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므로 商業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까지만 할지라고 士農工商의 직업적 서열이 일반화되어 있던 상황에서 商業을 農, 工보다 윗자리에 올려 진흥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관점을 잘 들어내 주고 있는 것이 아래와 같은 기사내용이다.

“그러므로 서양 사람들이 通商을 제일로 여겨 商賈를 農工의 윗자리에 올려 놓은 것은 農工이 있다 하더라도 상고가 없으면 필요 이상으로 물건이 쌓여 소용없게 될 것이니 몇 배의 소득이 생기고 몇 배의 제작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부유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²⁷⁾

“요즘의 서양제국에서는 모두 會社를 설립하여 商人들을 부르고 있는데, 실로 부강의 基礎라 하겠다. 대저 상업이란 한 고장에 있는 것을 영영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한 고장에 있는 것을 독점하여 자기 소유를 삼게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곳에 있는 물건을 저쪽 없는 곳에 공급하는 것이다. 또 저쪽에 남은 물건을 부족한 이쪽에다 보태주는 것이니, 이는 하늘이 사람을 기르고, 사람이 생을 누리는 방법이다. 이를 버리고 하지 않으면 農, 工이 모두 피폐해져, 하늘은 사람을 기르지 못하고, 사람은 생을 보존하지 못한다.”²⁸⁾

Ⅳ. 結 論

民族主義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도식적으로 파악하는 데 동의하지 않지

26) 漢城周報, 1889. 9. 6. 私議, '統計說'

27) 漢城旬報, 1884. 5. 25. 各國近事, '富國說'

28) 漢城旬報, 1883. 11. 20. 各國近事, '會社說'

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민족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민족성원의 內的 통합요소인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와 사회가 제국주의열강의 압력에 따른 開港이라는 외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漢城旬報》와 《漢城周報》는 정부가 발행하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공식적 통로로서 민족주의의 근간이라할 自主的 國權의 保存을 위해 민족 통합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근대적 민족주의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두 신문은 비록 관보로서 東道西器論的 改革의 입장을 지지했으나 自主國權의 保全을 위해 帝國主義列強의 侵奪을 경계하고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는데 우리 민족이 분발해 나설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사회속에 전파했다. 나아가 主權國家로서 존립하기 위한 여러가지 변혁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파함으로써 민족의 에너지를 통합하여 개혁의 목표구현에 나아가도록 힘썼다. 즉 정치적으로는 立憲君主制와 議會制의 도입을, 경제적으로는 鑛業과 商業의 진흥으로 自強을 도모하려 한 것이다.